



## 환경부-산림청, 자연자원 보전·관리 공동노력 협약

###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 설치... 정책 현안 논의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지난달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제1차 환경부·산림청 협업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례적 협의의 채널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그간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 보전이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했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급 및 소관 국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과제로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생태통로

설치, 보호(보전) 지역 지정·관리 협조, 숲가꾸기 사업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국립공원 내 산림 공동 협력사업, 평창동계올림픽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방안 등 6개 안건을 선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추가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협의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자연보전국장·산림보호국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활용키로 했다.

정연만 차관과 신원섭 청장은 “환경부와 산림청은 양 부처의 정책 목표가 유사한 만큼 협의회 구성으로 얻어질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둔 협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